

그리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132천 km ²	G D P	2,987억 달러
인구	11.30백만명	1 인 당 GDP	26,437달러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Euro (EUR)
대외정책	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	환율(달러당)	0.72

- 그리스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국가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및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3에 해당하며 약 천 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2009년 10월 새로 출범한 사회당(PASOK) 정부는 그리스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2.7%, 정부채무가 GDP의 113.4%에 달한다고 공개한 이후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촉발됨.
- 그리스는 IMF 및 EU와 2010년 5월에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12년 2월에는 1,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과 1,070억 유로 규모의 민간채권단 채권 탕감을 지원받기로 합의하였음.
- 그리스는 1952년에 NATO에 가입했으며, 1981년 및 2001년에 각각 EU 및 유로존에 가입함.

II. 경제동향

1.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그리스 금융부문, 유동성 부족현상 지속

○ 그리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부실대출 증가, 국채보유에 따른 손실 등으로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그리스 금융부문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2011년 7월 15일에 실시된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제2차 재무건전성평가(stress test)에서 총 91개 은행 중 7개 은행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그리스의 Agricultural Bank 및 EFG Eurobank 두 개 은행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 2011년 8월 29일 EFG Eurobank는 핵심자기자본비율(Tier 1 capital ratio) 기준 충족을 위해 그리스의 Alpha Bank와 합병할 계획임을 발표함.

- 그리스 상업은행들은 2012년 말까지 핵심자기자본비율을 9%로 확충해야 하는데, 그리스 대형 4개 은행은 2012년 5월 말 헬레닉금융안정기금(HFSF)을 통해 180억 유로를 지원받음.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구조 형성

○ 그리스는 유럽 경제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회원국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역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0년 기준 유럽 경제권이 그리스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 독일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12% 및 14%를 차지하며 독일이 단일국가로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분석됨 (EIU, Country Report, September 2011).

- * 주요 수출대상국('10): 독일(12%), 이탈리아(11%), 사이프러스(7%), 불가리아(7%), 미국(5%), 영국(5%), 터키(4%)
- * 주요 수입대상국('10): 독일(14%), 이탈리아(13%), 중국(7%), 프랑스(6%), 네덜란드(6%), 벨기에(5%), 스페인(4%)

□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

- 2001년 유로존 가입 전 그리스 재정수지 적자는 1997~2000년 평균 GDP 대비 4.4% 수준이었으나 2001~2010년에는 7.7% 수준으로 확대됨. 특히 2009년과 2010년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GDP 대비 15.6%와 10.5%로 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는 9.2% 수준에 달함.
- 2001년 유로존 가입 전 경상수지 적자는 1997~2000년 평균 53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1~2010년에는 평균 253억 달러 수준으로 급증함. 또한 2001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 확대되어 2008년에는 513억 달러(GDP 대비 14.9%)를 기록함. 그러나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60억 달러(GDP 대비 11.1%)와 309억 달러(GDP 대비 10.1%)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도 294억 달러(GDP 대비 9.8%) 수준임.

나. 성장 잠재력

□ 2008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경제 성장잠재력 위축

- 유로존 경제권 편입 이후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당분간 성장잠재력 위축

- 경제성장률 추이: -0.2%(2008)→-3.3%(2009)→-3.5%(2010)→-6.9%(2011)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그리스 재정위기로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위축

- 2008년 말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2010년 초에 발발한 그리스 재정

위기로 2008년 이후 FDI 유입이 위축되었는데, 2008년에 53억 달러를 기록한 FDI 유입액이 2009~10년에는 각각 24억 달러, 4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침.

- 그리스 재정위기 여파 지속으로 인한 투자신뢰도 하락에 따라 FDI 유입액은 2011년에도 4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기업경영여건평가, 중하위권 유지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평가(Doing Business rating)에서 그리스는 2009년 97/183위에서 2010년 101/182위, 2011년 100/183위로 평가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중하위권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사업개시, 재산등록, 투자자보호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은 수준임.

다. 정책성과

□ 사회당 정부, 과거 정부들의 통계수치 조작사실 공개로 경제위기 촉발

- 2009년 10월 총선 결과 집권여당으로 출범하게 된 사회당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통계수치 조작사실을 공개하며 그리스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2.7%이고 정부채무가 GDP의 113.4%인 2,693억 유로에 달한다고 언급하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발단이 됨.
- 그리스 정부는 2001년 유로존 가입 당시 정부채무 등의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유로존 가입 이후에도 재정개혁을 소홀히 하였으며 선심성 경제정책을 남발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남.
- * EU의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과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서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 이내, 정부채무 비중을 60% 이내로 억제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음.
- 그리스의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채무 규모가 공개됨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외채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촉발됨.

□ 그리스 의회, 정부의 2011~15년 중기재정계획 법안 의결했으나 실현 가능성 회의적

○ 2011년 6월 29일 그리스 정부는 세수확대, 정부지출 축소,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1~15년 중기재정계획 (Medium-Term Fiscal Strategy: MTF5)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리스 의회는 6월 30일에 동 법안을 의결함.

* 2011~15년 중기재정계획 법안은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의회에서 통과됨.

○ 2011~15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그리스 정부는 2015년까지 정부예산을 280억 유로 절감하고 국유자산 민영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500억 유로 증대시킬 계획임.

○ 그러나 EIU 및 D&B는 그리스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수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이며 EU 및 IMF의 구제금융 지원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과중하여 그리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의 성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함.

□ 그리스 정부채무는 GDP의 160% 상회, EU 회원국 내 최고 수준

○ 그리스 정부채무는 2011년 말 GDP 대비 165.3%를 기록하는 등 과중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외채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 113.0%(2008)→129.4%(2009)→145.0%(2010)→165.3%(2011)

□ 그리스 정부 단기외채 상환능력 의문

○ 2011년 말 기준 그리스의 단기외채는 1,908.8억 유로로 대외지급준비자산 53.8억 유로에 비해 매우 과중한 상태임.

- 과거 경제위기 경험국의 사례에서 단기외채잔액/대외지급준비자산 비중

이 100%를 상회할 경우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 점을 고려하면, 그리스의 2011년 말 동 비중이 35.5배에 달해 EU 등의 금융지원이 없으면, 디폴트 가능성이 농후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2년 5월 총선 결과, 연정 구성 실패

- 5월 6일 그리스 총선 결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신민주당과 사회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함.
 - 신민주당은 18.9%의 득표율로 제1당이 되었으나 108석 확보에 그쳤고, 다수당이었던 사회당은 13.2%의 득표율로 제3당(41석)에 그침.
 - 반면, 긴축정책 반대와 구제금융 재협상을 공약한 급진좌파 정당인 시리자는 16.8%의 득표율로 52석을 얻어 제2당이 됨.
- 제1당이 된 신민주당이 연정 구성에 실패한 후, 시리자, 사회당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함.

□ 2012년 6월 17일 2차 총선 결과, 신민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되었으나 정국 불안 잠재

- 6월 17일 2차 총선 결과 신민주당이 29.66%의 득표율로 129석을 차지하였고, 제3당인 사회당(33석), 제6당인 민주좌파(17석)와 연정을 구성하여 안정적 과반(300석 중 179석)을 확보함. 연정은 구제금융 지원 조건 부분 재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구제금융 지원 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한 시리자가 26.89%를 득표하며 제1야당(71석)으로 부상함에 따라 향후 정국 불안의 중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긴축 재정정책 및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 빈번

- 그리스 정부는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삭감 등을 포함한 긴축 재정정책 및 국유자산 민영화를 추진하였지만, 공공부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 불안정이 초래됨.
- 2011년 6월 28일에는 그리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1~15 중기재정계획 법안에 대해 그리스 국민 수천 명이 의회 앞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 삭감, 국유자산 민영화 등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으며, 6월 30일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긴축 재정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함.
- 2012년 2월 이후에도 그리스 노동계가 정부의 긴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이는 등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지속됨.

□ 높은 실업률로 사회불안 초래

-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재정위기 대처방안으로서의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시행, 외국인 투자부진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여 2011년에 17.7%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21.7%로 상승하였음.

* 실업률 변동추이: 7.7%(2008) → 9.5%(2009) → 12.6%(2010) → 17.7%(2011) → 21.7%(2012.2)

-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하락하였으며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불안이 초래됨.

3. 국제관계

□ 그리스 대외위상의 지속 하락 전망

- 그리스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상환을 위해 EU, IMF 등의 긴급 구제금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등 EU 회원국과의 관계 유지에 역점을 두어 왔음.
- 그러나 최근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에서는 그리스 지원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구제금융 재협상과 관련하여 EU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

□ 터키 및 마케도니아와 긴장관계 지속

- 터키와는 사이프러스를 두고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마케도니아와는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NATO 및 EU 가입을 반대함에 따라 긴장상태가 계속됨.

* 그리스는 1981년에 EU 회원국이 되었으며 사이프러스와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하고 있어 터키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12년 2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패키지 합의

- 2012년 2월 21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2010년 5월 제공된 1차 구제금융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민간 채권단의 국채교환을 전제로 2014년까지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며, 3월 12일 2차 구제금융을 최종 결정함.

- 그리스 의회는 2012년 2월 13일 최저임금 약 22% 삭감, 2015년까지 공무원 20% 감원 등을 통한 2012년 33억 유로 규모의 긴축 등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요구된 재정 긴축안을 재적의석 300석 중 찬성 199표, 반대 74표로 통과시킴.

- 민간채권단은 보유한 약 2,060억 유로의 그리스 국채 중 1,070억 유로 (53.5%)를 탕감하고, 보유 국채의 31.5%에 대해서는 만기 11년부터 30년까지의 20종의 새로운 그리스 국채로 교환받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2년 만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채권으로 교환받기로 그리스 정부와 합의함.
- 그리스 정부는 민간채권단으로부터 국채교환 참여 여부를 통보받은 결과 교환대상 국채 2,060억 유로 중 그리스법에 따라 발행되어 집단행동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s: CAC)가 적용되는 1,770억 유로 가운데 1,520억 유로가 참여키로 하였으며, 국제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 290억 유로 중 200억 유로도 국채교환 참여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힘.
- 그리스 정부가 집단행동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국채교환 규모는 그리스법에 따라 발행된 1,770억 유로와 국제법에 따라 발행된 200억 유로 등 총 1,970억 유로임.

* 집단행동조항(Collective Action Clauses): 민간 채권단의 참여율이 66%를 넘을 경우 채권단 전체에 국채교환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 조항.

□ 2차 구제금융 후에도 디폴트 우려 지속 예상 (EU 등의 구제금융 지원에 과도한 의존 경향)

- 2012년 2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의 2차 구제금융 지원 합의로 그리스는 2012년 3월에 만기도래하는 국채를 상환하고 디폴트 위험을 일단 넘김. 그러나 기일이 도래하는 외채상환을 위해 EU 등의 긴급 구제금융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국채발행으로 기일 도래 외채를 상환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그리스 정부의 획기적인 자구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2차 구제금융 후에도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2012년 말 그리스 정부채무가 GDP의 약 162%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GDP의 100% 이내로 추가 채무상각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됨.

2. 국제시장평가

□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은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그리스 재정위기 발발로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9년 말 이후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수차례 하향 조정하였으며 2012년 6월 기준으로 그리스 신용등급은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S&P: BB-(‘11.3월) → B(‘11.5월) → CCC(‘11.6월) → CC(‘11.7월) → SD(‘12.2월) → CCC(‘12.5월)
 - Moody’s: B1(‘11.3월) → Caa1(‘11.6월) → Ca(‘11.7월) → C(‘12.3월)
 - Fitch: B+(‘11.5월) → CCC(‘11.7월) → C(‘12.2월) → RD(‘12.3월) → B-(‘12.3월) → CCC(‘12.5월)
- S&P는 2009년 12월 16일에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2010년 4월 27일에는 BB+로 세 단계 하향조정함. S&P는 2011년 들어서도 3월에 그리스 정부의 채무조정 가능성을 반영하여 BB-로 평가했고, 5월 9일에는 B, 6월 13일에는 CCC로 각각 하향조정함. 이어 S&P는 7월 27일에 그리스 신용등급을 CC로 하향조정함. 2012년 2월 27일, S&P는 2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집단행동조항(CACs)이 삽입된 점을 들어 그리스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SD)로 강등하였으나, 5월 2일에는 그리스 부채 감축등을 반영하여 그리스 신용등급을 CCC로 상향 조정함.
- Moody’s는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09년 12월 22일에 A1에서 A2로, 2010년 4월 22일에 A3로, 6월 14일에 Ba1으로 각각 하향조정함. 이후 2011년 3월 7일에 B1, 6월 1일에 Caa1으로 추가적으로 하향조정했으며 7월 25일에는 민간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그리스 신용등급을 Ca로 하향조정함. 2012년 3월 2일에는 민간채권단에 대한 채무조정을 반영해 그리스 신용등급을 디폴트 등급 수준인 C로 강등함.
- Fitch는 2009년 10월 22일 및 12월 8일에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각각 A에서 A-로, A-에서 BBB+로 하향조정했으며 2010년 4월에는 BBB-로 추가 하향조정함. 또 2011년 5월 20일에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3단계 하향조정했으며 2011년 7월 13일에는 유

로존의 그리스 지원 지연, 그리스의 거시경제 전망 악화 등을 이유로 그리스 신용등급을 CCC로 추가 하향조정함. 2012년 2월 22일 피치는 그리스 정부의 국채 교환조건 등을 반영하여 그리스 신용등급을 C등급으로 하향조정한 후 3월 9일에는 그리스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 (Restricted Default: RD) 등급으로 강등함. 3월 13일에는 국채교환 성공을 반영해 그리스 신용등급을 B-로 상향조정한 이후 5월 17일 정치 불안에 따른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을 이유로 CCC로 다시 강등함.

<표 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2012.7.)	D2 (2012.3.)
OECD ^{주)}	0등급 (2012.1.)	0등급 (2011.1.)
S&P	CCC (2012.5.)	SD (2012.2.)
Moody's	C (2012.3.)	Ca (2011.7.)
Fitch	CCC (2012.5.)	B- (2012.3.)

주) OECD는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가입국이면서 세계은행 분류 고속득국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고 0등급을 부여함.

□ 그리스 국채수익률, 높은 수준 유지

-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12년 3월 15일 29.46%를 기록한 이후 25% 내외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함. 5월 초 20% 아래로 하락한 이후 5월 말 14.00%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6월 22일 17.10%를 기록하는 등 17%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그리스 수출상품에 대한 신규 보험 인수 중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1년 4월 5일 (북한과는 미수교)

- 양국간 수교 역사는 긴 편이며, 무역, 과학기술, 항공, 관광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한국-그리스 주요 협정 체결 현황

: 무역협정(1974), 과학기술협정(1987), 항공협정(1995), 투자보장협정(1995), 이중과세방지협정(1995), 관광협정(2006), 해상협정(2006)

□ 2011년 대 그리스 교역규모 소폭 증가

○ 2008년 하반기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및 2009년 말에 발발한 그리스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대 그리스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60.4% 급감한 12.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중 대 그리스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14.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2011년 말 기준 그리스는 우리나라의 50위 수출대상국, 85위 수입대상국임.

* 한국-그리스 교역규모 추이

: 15.4억 달러(2008)→32.6억 달러(2009)→12.9억 달러(2010)→14.4억 달러(2011)

□ 대 그리스 직접투자 실적(2012년 3월 말): 10건, 780만 달러(누계 기준)

○ 우리나라의 대 그리스 직접투자 실적은 2012년 3월 말 누계기준으로 10건, 780만 달러로 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직접투자 실적: 13만 달러(2008) → 61만 달러(2009) → 3만 달러(2010) → 없음(2011)

<표 2> 한-그리스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3,203	1,209	1,350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자동차
수 입	56	82	91	합금철 선철 및 고철, 기호식품, 모피, 석유제품
합 계	3,259	1,291	1,441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2012년 2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패키지에 합의하였으며, 동 구제금융 패키지에 채무 53.5% 탕감 등 채무조정 관련 집단행동조항이 포함되었고 그리스 정부는 동 조항을 국채교환시 적용함. 그리스 정부 디폴트 가능성이 확산되며 그리스의 국채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2월 말 이후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연이어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2012년 6월 현재 그리스 신용등급은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또한 2012년 5월 총선 결과 신민주당, 시리자, 사회당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하였으며, 이후 6월 2차 총선에서 신민주당 중심의 연정이 구성됨. 그러나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 등과 관련하여 정치불안이 우려되고,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 및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그리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그리스 재정위기로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위축되었음. 그리스는 유로존 경제권 편입 이후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경제 성장잠재력이 위축될 것으로 보임. 최근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에서는 그리스 지원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구제금융 재협상과 관련하여 EU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위험이 있는 등 그리스의 대외위상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선임조사역 김찬수 (☎02-3779-5703)

E-mail: avik@koreaexim.go.kr